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16
----------	------

발의연월일 : 2024. 12. 16.

발 의 자 : 백승아 · 이용우 · 이병진
김준혁 · 김 윤 · 박해철
박희승 · 한창민 · 박용갑
강준현 · 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1조의2, 제13조).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심의를”을 “심의 및 의결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계엄 시 지휘·감독 등에 대한 국회 보고)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 사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결과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5. 제10조의 비상계엄하 군사법원의 재판 사항
6. 그 밖에 계엄 선포 이후 각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사무 내용 및 지휘·감독 이행 사항

제13조의 제목 중 “불체포특권”을 “불체포특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⑥ (생 략) <u><신 설></u>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심의 및 의결을</u> -----. ⑥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계엄 시 지휘·감독 등에 대한 국회 보고)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이 해제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1. <u>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 사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결과</u> 2. <u>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사항</u> 3. <u>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u>

<p>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생략)</p> <p><u><신설></u></p>	<p><u>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u></p> <p><u>5. 제10조의 비상계엄하 군사법원의 재판 사항</u></p> <p><u>6. 그 밖에 계엄 선포 이후 각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사무 내용 및 지휘·감독 이행 사항</u></p> <p>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p>
--	--